확진자 동선 포함 영암군청·면사무소 3곳 줄줄이 폐쇄

전남 셧다운 행정기관 속출

도청 감사관실 등 3곳 부분폐쇄
30번 확진자와 골프라운딩
광주·전남 공무원 11명은 음성
공무원 500여명 진단검사
곳곳 민원 업무 등 차질 '혼란'

9일 오전 방역관들이 영암군청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으로 지목된 군청 청사, 면사무소 3곳, 경로당 3곳을 폐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코로나 19가 9일 전남지역 행정기관을 강타했다. 전남 30번 확진자로 분류된 영암 금정면장(50대 남성)이 확진 판정 받기 직전 주말인 지난 4일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11명과 함께 한 골프를 치는 등 밀착접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남도청의 일부 부서 사무실, 영암군청 청사 등이 폐쇄된 것이다. 전남 31번 확진자 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점에서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남도와 각 시·군은 긴장 속에 방역당국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전남도와 영암군청, 보성군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로 전남지역 행정기관 7곳의 사무실 일부 또는 전체가 폐쇄됐다. 폐쇄된 곳은 전남도청 감사관실(37명 근무), 영암군청(500여명 〃), 금정·시종·서호면사무소(이상 40여명), 보성군청 주민복지과(26명 〃), 보성군 회천면(10여명 〃) 등이다.

◇광주발 코로나 19 여파 전남 7개 관공서 일부 또는 전체 폐쇄=영암군청은 이날 새벽 금정면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다. 전남 31번 확진자로 분류된 금정면사무소 사회복지직 30대 공무원과 함께 거주하는 언니가 군청 친환경농업과에 근무하기 때문이다. 전남 31번 확진자가 최근 들렀던 영암 시종면사무소·서호면사무소도 전날 금정면사무소에 이어 이날 폐쇄됐다. 도청 감사관실은 최근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보조금 사업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남 31번 확진자 언니와 접촉했던 사실이 파악되면서 이날 하루 폐쇄됐다.

보성군 회천면사무소의 경우 지난 4일 전남 30번 확진자와 영암 아크로 CC에서 골프라운딩을 한 공무원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곳이다. 해당 공무원이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6일 군청 주민복지과로 옮겨가면서 군청 일부 부서와 면사무소가 이날 함께 폐쇄됐다.

행정관청 연쇄 폐쇄와 함께 500명을 웃도는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곳곳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걱정과 함께 민원 업무 불편까지 떠안게 됐다.

전남 30번 확진자와 함께 골프라운딩을 11명의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라운딩을 함께 한 공무원들은 광주시(1명), 전남도(3명), 영암군(7명), 보성군(1명) 소속이다.

전남 행정기관 연쇄 셧다운을 부른 12명의 공직자 골프 라운딩을 두고는 부적절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광주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록 주말이지만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모여 골프를 치고, 그로 인해 사상 초유의 행정기관 연쇄 폐쇄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전남 30번 확진자 발생 브리핑을 마치고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박종필 영암 부군수는 "당시 휴가를 내고 낮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야간에 광주 고시학원에 가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군청 직원·군민 망연자실=영암군은 전남 30번 확진자의 근무지인 영암군 금정면사무소의 동료인 30대 여성이 새벽 1시 확진 판정을 받자 고민 끝에 군청 폐쇄를 결정했다. 이 여성 공무원이 지난 6일 언니가 근무하는 군청 친환경농업과와 투자경제과를 들러 다수의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은 같은 날 새벽 3시 전직원에게 군청과 함께 31번 확진자가 들른 서호면사무소, 시종면사무소 등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뒤 오전 7시 전 군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군청 등의 폐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 오전부터 북적이던 군청과 그 주변에는 정적이 흐르고, 군청에서 400m 이상 떨어진 보건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공무원과 주민들로 붐볐다.

우선 영암군에 근무하는 1000여 명의 공직자 가운데 영암군청, 서호면·시종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검체 채취가 마무리된 것은 오후 4시30분께. 이어서 32번 확진자와 접촉한 일반주민들이 줄을 섰다. 60대 남성은 "코로나19가 도시에서만 유행할 줄 알았는데 영암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영암군청 주변 식당, 커피숍 등은 하루 종일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분위기였으며, 일부는 오후에 셔터를 내리기도 했다. 주요 골목길에도 인적이 사라졌으며, 지나는 차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청사 내에 총무과 직원 10여명만 우선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민원 등은 인근 면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을 가두 방송으로 안내하고, 이장들에게 개별 주택을 찾아 방역수칙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31번 확진자의 거주지는 화순군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관공서는 물론 마을 경로당, 영암군실내체육관, 금정면 소재 음식점, 커피숍 등을 들렀다.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232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31번 확진자의 증상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언니와 조카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영암군, 화순군 역학조사반에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행히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접촉자 파악이 최우선인 만큼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전남도, 청사 폐쇄 대비 행정업무 매뉴얼 마련

코로나 19 사태로 잇따라 공무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남도가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비한 행정 업무 매뉴얼 작성에 착수했다. 도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셧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민원 업무 처리, 전자 문서 결재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브리핑에서 "오전 간부 회의에서 공무원 감염병 확진에 대비한 업무 추진 메뉴얼을 마련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전남 30번 확진자(영암 금정면장) 발생 여파로 전남도청 세정과·일자리정책과·농업정책과 등 3개 부서가 폐쇄되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날부터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에게 휴대전화에서 행정문서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고, 관련 업무를 숙지하도록 했다. 이른 시일 안에 결제가 필요한 서류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결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민원인 불편을 덜기로 했다.

또 도청 공무원 확진으로 청사가 폐쇄될 경우 상황 유지를 위해 남겨둘 필수 근무 인력, 외부 임시 사무소 마련 등 감염 규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통해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며 "도청 공무원 일부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 19 확진을 받게 될 경우 도청사 폐쇄가 불가피하므로 이번 기회에 시범 운영을 하고, 코로나 19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한 행정 업무 메뉴얼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임기 2년 완수…당 대표 되면 대선 출마 않겠다"

김부겸 민주당 전대 출마선언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화'를 모토로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꽃 가마 타는 것이 아닌 땀 흘려 노 젓는, 임기 2년의 중책을 완수하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3월 대선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인 이 의원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꽃가마론'은 대세론을 기반으로 당권 경쟁에 나서는 이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일 두리뭉실한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과는 달리 김 전 의원은 확실한 당권 도전에 대한 목표와 함께 현안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도, 영호남 대결도 아닌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재집권의 선봉에서 확실한 해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튼튼한 사회망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토론에 들어가 중장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 관계자들을 겨냥한 다주택 처분 여론과 관련,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적어도 3개월 이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누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는 사회적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한미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대책 등을 둘러싼 청년층 불만에 대해서는 "분노를 잘 알고 있다, 20·30대 좌절에 대해 답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이 지역 프레임에 갖히는 것을 막기위해 호남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과는 반대로 김 전 의원은 과감하게 호남 정서를 두드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에 앞서 지난 7일 광주와 전주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호남 표심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